

보도일시 (인터넷, 지면) 2023. 9. 21.(목) 16:00 배포 2023. 9. 18.(월) 13:00

## 과감한 어업규제 철폐 및 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

- 거미줄 어업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어업인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
- ‘어획증명제도’로 불법 수산물 시장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9월 21일(목) 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으나,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유통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510)
	어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미연 (044-200-5511)

## I. 추진배경

### □ 어업은 수산자원 지속 고갈, 규제 위주의 비효율적 관리로 한계 직면

- 우리 어업은 115년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위주로 관리 중이며, 경쟁조업에 따른 남획 등 <sup>Tragedy of the Commons</sup> 공유재의 비극\*\* 지속 발생
  -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 \*\* 한정된 수산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무분별한 어획으로 자원이 계속 고갈되는 악순환 초래
-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하락하고 현장 불편·갈등만 가중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 대전환 필요

### □ 어업은 국민 건강 먹거리 제공과 직결되므로 체계적 관리 필요

- 어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은 국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하나, 현재 수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
-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위치·시기 등을 제공하여 日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 어획물의 유입 사전 차단 필요

### □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 도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산선진국으로 발돋움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선진국(EU, 미국 등)은 어획량(<sup>Total Allowable Catch</sup>TAC) 중심의 어업관리체제로 既 전환하고,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모니터링 강화
  - \* 수출국이 어획시기·장소·방법 등을 제공하여 수출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된 것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EU·미국·일본 등은 어획증명서가 발급된 수산물만 수입 중
- <sup>인해경제프레임워크</sup>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근절 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국제추세에 맞는 제도개편 필요
  - \* ❶어획량(TAC) 중심 어업관리 ❷어획~운반~양륙 각 단계별 어획량, 위치·시기 등 모니터링

◆ 규제 중심의 현행 어업관리제도는 간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 통상 협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 국민 불안감 해소 등 기여

## Ⅱ. 세부 추진과제

### 1. 기존 어업규제 혁신

#### ☐ 어업 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우선 철폐

- (비용 절감)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 검사 대상을 10톤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23.下)

\* 어선 기관(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통해 기관 내부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10톤 미만 어선까지 비개방 검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검사비용 절감 및 어업수익 증대

- (안전 강화) 전복사고 예방 및 조업 편의를 위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 허용 등 추진('23.下)

- (조업 효율) 마을어장 내 해삼 등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채취 방법 개선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추진

#### ☐ 어획량 관리를 통한 어업규제 최소화

- (규제 간소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과 TAC 전면 도입으로 불합리한 규제 대폭 축소

- 어획량 관리로 대체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조업효율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 (자율성 강화) 시·도 연안자원관리\*(연안)를 통해 지방정부 자율권을 확대 하고, 어업규제완화 사업(근해)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선 추진

\* 시·도별 해역 특성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함

## 2.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 구축

### ☐ (기본 조성) 자원평가 정확성 향상 + 자원량에 맞게 선제적 구조조정

- (자원평가) TAC 신뢰 제고를 위해 연안 자원조사 강화 및 빅데이터 (어업인 보고 등) 활용 등 자원평가 고도화
- (구조조정) 자원량에 맞게 어선을 감척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 ☐ (TAC 확대) 모든 어선 TAC 도입 +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전면 도입) 연근해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
  - \* 다만 어획량이 적은 영세어선, 정치성 어업 등 일부 어선은 어종구분없이 연간 총어획한도 설정·관리
- (스마트 관리) 각 어선에서 보고한 어획량 등을 반영하여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

### ☐ (시장경제) 어업인 간 TAC 할당량 거래(ITQ) 등을 통한 민간 자율성 강화

- (ITQ 도입) TAC 할당량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 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를 도입 검토
- (자조금 조성) 전체 TAC의 일정량을 유보·판매하여 어업인 자조금 조성

## 3.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해상관리) 실시간 조업상황 모니터링

- (위치모니터링)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 파악
- (어획보고)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 받고, 투명한 이력추적을 위해 운반선을 통한 어획물의 이동 관리 강화

---

☐ **(양륙관리)**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철저한 양륙관리

---

- **(양륙항 지정)** 5톤 이상 어선은 지정항구 양륙 등 집중 관리
  - **(양륙량 확인)** 모든 어선은 양륙 후 어종·양 등을 보고하고, 어업감독관이 어획확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 \* 생산일시·위치, 생산자, 어종, 생산량 및 유통유형(활어, 선어, 냉동 등) 등 기본정보 표시

---

☐ **(유통·수입관리)** 불법어획물의 유통·수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

- **(유통 관리)** 어획확인서가 발급된 적법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
- **(수입 관리)** 해외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 차단을 위해 수출국 정부가 적법 수산물임을 입증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 시행

### III. 기대효과

☐ **(어업인)** 조업 편의·효율성↑, 어가 수익↑, 자율성↑

- 거미줄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조업 편의 및 효율성 향상
- TAC 확대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어 어업생산성 및 어가수익이 증대되고, 시장친화형 제도(ITQ) 도입으로 민간의 자율성 강화

☐ **(국민)** 정확한 생산정보 확보↑, 수산물 안심 소비↑

- 정확한 어획위치·시기 등을 제공함으로써 日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

☐ **(정부)** 통상협상력·수출증대↑, 경제효과↑, 수산선진국 도약↑

- 글로벌 스탠다드 어업관리로 통상협상력을 확보하는 한편,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 어업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라 단속체계를 효율화(해상→육상 중심)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 절감